

【 국내금융 뉴스 】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0.26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힘.
 -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됨.
 - 향후 5년 간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투자규모는 약 75.8조원으로 추계되며, 저출산 39.7조원(1차 19.7조원), 고령화 28.3조원(1차 15.8조원), 성장동력 7.8조원(1차 6.7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임.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통상임금의 40%)를 도입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 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3천5백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임.
 -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임.
 - 제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2020년 이후)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10/26)